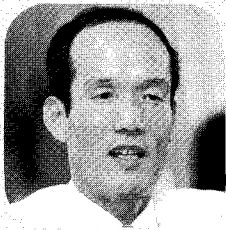


농민을 위한 농정, 어떻게 해야 실현할 수 있나?



농업정책연구소장
이헌목 (李憲穆)

정부는 돈을 “쏟아 붓고”, 공무원들은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연구원들은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농협임직원들은 조합원 농민에게 ‘실익’을 주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농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농민들의 농협개혁을 외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필자는 그 많은 농정대책과 농협운동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지난 12월7일자 농어민신문 농업마당에 글을 올렸다.

“일이 잘되든 못되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내 일처럼, 내 월급 주는 회사의 일처럼 안 해도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농민을 위해 세심한 정책을 세우고, 집행을 한다 해도 내 돈 들여 내 사업하듯이, 내가 잘못하면 망하는 회사 일처럼 되지 않는다. 획일적인 농정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성과가 나든 안 나든 아무런 책임도 없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는다. 기술개발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이 엄정한 심사를 하여 특정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하면 되었지, 시장에서 통하는 농산물이 생산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것이다. 농협직원들도 신용사업이나 잘하고, 경제사업이야 지금 하는 대로 하면 되었지, 골치 아픈 공동선별이다 공동계산이다 떠벌릴 게 없다. 농민들이 꼭 하자는 것도 아닌데 힘든 일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하지 않게 하고,

연구원들이 농민에게 필요한 연구를 하게하고, 농협임직원이 농민 입안의 혀처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된다. 지금의 농정, 지금의 연구개발, 지금의 농협은 농업·농촌문제의 ‘주체’인 농민을 어린애처럼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연구원들이, 농협임직원들이 농민을 대신해서 다 해주는 체제이다. 농민은 ‘주체’가 아니라 그들이 시혜를 베푸는 대상인 것이다. 많은 농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시혜를 좀더 베풀든 안 베풀든 베푸는 사람의 마음에 달렸다. 시혜를 받는 사람이 많다 적다 불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체제와 마음가짐으로는 현재의 농정 흐름을 바꿀 수 없고, 현재의 농협 행태를 바꿀 수 없다. 주인이 어리석으면 일꾼들이 제몫 챙기는데 신경 쓰고, 편한대로 일하는 게 세상의 이치다. 농업·농촌문제에 있어서 가장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걸려있는 농민들이 ‘주인’ 행세를 똑똑히 하지 않는 한 이 문제가 풀릴 수 없다는 게 필자의 확신이다. 어떻게 해야 농민들이 ‘주인’ 행세를 똑똑히 할 수 있는가?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업·농촌문제는 결국 농민이 주도적으로 풀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농민인 내가 나서지 않는 한 지금의 농정흐름, 지금의 연구방식, 지금의 농협행태가 바뀌지 않을 것이며, 농업·농촌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지금껏 남이 해주는 대로 기다려 보았지만 되는 게 없다는 것을

이미 지겨울 정도로 경험했다. 뻔히 알면서도 또 남에게 맡겨놓고 기다린다면 또 다른 10년이 지나도 우리 농업·농촌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둘째, 내 뜻을 실현하려면 뜻이 같은 사람끼리 뭉쳐서 한목소리를 내어 주어야 한다. 농민 개개인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다.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끼리 뭉치고 연대해야 진짜 힘이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해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 내는 목소리는 힘이 없다. 품목별로,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농민끼리 뭉쳐야 한다. 더 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을 때는 품목간, 지역간 연대를 해야 한다. 모두가 바쁘다는 핑계로, 관심 없다는 태도로 내 할일이나 하겠다면 내 목소리는 누가 내어 주는가? 아무런 '희생'도 없이 열매만 따먹으려는 암체들만 있고, 농업·농촌문제에 무관심한 농민들만 있다면 열매 자체가 열릴 수가 있는가?

셋째, 농민들이 단합해서 내는 목소리가 보통의 목소리가 아니라 상대방이 꺾잡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이 '어문 짓'을 못한다. 농민들이 내는 목소리가 전문적이고, 구체적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제대로 된 정책비판과 대안제출을 위해서는 정책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려면 기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농협을 개혁하려면 협동조합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비판과 참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스스로를 갈고 닦고, 우리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할 전문가를 영입해 함께 대응해야 한다.

넷째, 농민을 대표할 사람을 여러 의사결정기구에 참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필자는 농협은 물론이고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구를 이사회체제로 바꾸고, 그 이사회에 과반수를 농민의 대표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이 '남의 일' 하듯 하지 못하게 내부에서 감시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사회에다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사를 뽑는 게 아니라

농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그대로 이사가 되게 해야 한다. 필자는 얼마 전 도매시장관련 전문가토론회에서 도매시장의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고, 운영위원회는 학계, 소비자단체, 농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 도매법인에도 사외이사를 두고, 농민단체가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다섯째, 농민조직을 재정적으로, 조직적으로, 사업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 사람과 돈이 있어야 한다. 회비를 내는데 인색해서도 안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돈을 버는데 서로 협조해야 한다. 농민들이 품목별 또는 지역별로 단단하게 뭉쳐서 경제사업을 펼치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고, 회비도 많이 낼 수 있다.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충분하게' 받는다면 여기서도 돈을 벌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누수 없이 집행하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현장사정을 잘 아는 농민조직과 책임을 공유하는 방식이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로 공무원들 늘리거나, 농협직원을 늘리거나, 공사직원을 늘리는 것은 너무 많은 '농민을 위한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농민조직과 정책집행의 책임을 나눠 질 경우, '획일적인' 정책을 현장사정에 맞출 수 있고, '부실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도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농민을 위한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주인의식을 뚜렷이 하고, 품목별, 지역별로 뭉쳐서 정부와 지자체에 대해 전문적이고도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고, 농업지원 기관·단체를 '지배' 해야 한다. 10만 농림공직자가 진정 우리 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119조원의 투융자예산이 진정 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위해 쓰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농협의 그 많은 전문가와 자산이 농민을 위해 쓰이게 만들어야 한다. 농업계의 농과대학과 연구소가 진정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연구를 하게 해야 한다. 농업관련 공사도, 연구원도 진정 우리 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모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농민들은 스스로를 가다듬어야 한다. '주인'은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농연**